

남북한 부패 비교연구

Corrup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 A Comparative Perspective

김 영 종 (Kim, Young Jong)*

ABSTRACT

This research involv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rruption phenomena in North and South Korea. Due to the distinction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causes of corruption for each country differ to a certain extent. In case of North Korea, the main cause of corruption can be viewed as the result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socialism, while in South Korea, the capitalistic development in the bureaucracy is one of the major roots of the cause.

It is the author's view that the destructive power of corruption in North Korea is much stronger when compared to South Korea. Furthermore,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in North Korea implicate a possible capitalistic development, while social conflict and distrust between people and government are the likely effect of corruption in South Korea. This is illustrated by discussion of several corruption incidences that verify the corruption phenomena and its consequences to the society.

Finally, since corruption phenomena is an obstacle for national development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e preventive strategies for corruption are suggested.

In short, the author contends that as corruption hinders national development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preventive anti-corruption strategies should be introduced to curb it.

*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行·博)

1. 문제의 발견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부패(corruption)가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구조적 모순(structural contradiction)에서 유발된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89-1991년 기간 중 발생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collapse)'¹⁾하거나 '대실패(the grand failure)'²⁾로 끝나거나, 또는 '사회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만연되어있는 부패의 엄청난 파괴력(destructive power)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패는 자본주의 국가의 전유물 인 것처럼 주장하여 온 종래의 사회주의자들의 시각은 그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부패현상의 보편성을 지적하는 후기 기능주의적(post-functionalist)시각이 문제의 실제 접근에 더 가까운 논리적 전개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가 과연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한 부패의 수준인가 또는 상이한가, 그리고 그 정도 및 원인, 처방은 어떠한가는 그 특수성과 보편성을 공히 고려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경우와 그리고 많은 자본주의 국가 중 남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론적 접근(comparative approach)으로 논의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사회주의 국가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된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료수집의 곤란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의 한계점등이 논의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II. 부패의 개념틀

부패의 실체는 좀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암이다(social cancer)'이다. 그러므로 접근방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상이한 개념적 정의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접근의 난해성(difficulty) 때문에 "빙산일각", "독수리 눈", "스핑크스", "미확인물체(identified flying object)", "괴물" 등의 이름에 비유되기도 한다. 특히 정치, 행정의 부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정치, 행정의 개념적 정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행정의 미분화 현상이 뚜렷하고, 실제로 일당독재의 국가(one party-state)이고, 폐쇄적 당 관료주의 국가이며, 권위주의적 동원정치 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음에 그 정치행정부패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첫째,

1) Leslie Homes, *The End of Communist Power :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Samuel, Huntington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eaven : The Yale University Press, 1969)

2)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0)

부패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또는 엘리트들의 정치, 행정 문화(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ulture)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일탈행태(deviant behavior)로서 정치 행정의 권력을 오용, 남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치적 또는 행정권한을 일탈하여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는 여기에 해당된다.³⁾

둘째, 부패는 개인적 행태 보다는 정치행정의 제도나 체제의 미비나 취약성에서 배태된 산물(outputs)로서 부패의 토양이나, 소지(opportunity), 그리고 잘못된 제도 그 자체가 곧 부패라고 보는 개념정의이다. 이 경우는 사실상 제도적 부패(institutional corruption)라고 할 것이다. Michael Johnston은 부패는 개인의 행태나, 구조적인 취약성, 또는 윤리적 효력의 부족에서보다는 정치제도의 긴장에서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⁴⁾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정책과 제도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소수의 지배계층인 엘리트(elites)의 의식구조와 가치체계(value system)의 배분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곧 제도이며 권력이라고 하는 엘리트이론에 의하면⁵⁾ 부패란 정치, 행정인이 취약한 통제제도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 탐욕적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와 맥락을 공유한다. David Gould⁶⁾에 의하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사회기강이 해이되거나 정치적 정통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정부의 경제활동의 독점 등이 바로 부패소지가 되고, 이러한 취약점은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연결되어서 만연된 부패현상을 보게 된다.

셋째, 부패는 정치행정조직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정의이다. 즉 정치행정의 역할담당자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가능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일탈하여 구조적 탐욕과 사익추구를 위한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의 총체적 개념이다. 이 경우는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적 접근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합리성, 목적성, 균형성, 그리고 구조적 상호관련성을 일탈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그리고 비합리적 일체의 정치적 추문(political scandal)을 일컫는다.⁷⁾

마지막으로, 부패란 정치인이나 또는 행정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들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공직남용, 사익추구, 그리고 공직의 책임과 국민의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일탈

3) 김영중, “북한의 정치부패와 인권”, 북한연구(1995) 통권20호, pp. 44 ~ 60

4) Johnston Michael,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 (Montercy Cole, 1982)
Young Jong Kim, *Bureaucratic Corruption : The Case of Korea* (4th ed.) (Seoul : The Chomyung Press, 1994)

Kligaard Robert, *Controlling Corruption* (Berkly :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8)

5) Thomas.R.Dye, and Zeigler L.Harman, *The Irony of Democracy* (New York : Duchbury Press, 1975)
Murray, Edelman,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6) David Gould J.(1983), “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Illust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Washington, D.C.: pp.1 ~ 41.

7) Suzanne Garment, *Scandal : The Culture of Mistrust in America* (New York : Time Books, 1991)
Ferrel, Head, *Public Administration : A Comparative Prespective* (New York : Marcel, Dekker, Inc, 1993)
Arnold J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 : Reading in Commpative Analysis* (New Burnswick : Transtion Books, 1993)

한 일체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를 말한다. 이러한 것은 보다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에 의한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⁸⁾

III. 남북한 부패현상의 특징

먼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국가들의 내적 구조적 권위주의적 정부관료제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논의하여 보자.

첫째, 급진적 구조주의(radical structuralism)적 패러다임(paradigm)의 조직이론에 근거한 관료제에서 나타난 부패현상이다.⁹⁾ 사회현상을 구조적 모순, 박탈, 소외, 갈등 그리고 해방 등의 차원으로 보면서 구조적 모순의 해결에는 계급적 투쟁과 급진적 변화로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정부를 창출하였고, 소수의 일당관료와 정치엘리트에 의한 권력 남용형 정치행정부패를 유발한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폐쇄적이고 X이론적인 인간의 실체¹⁰⁾ 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간관이며 사회주의 정부관료제는 지배계급의 하수인이고 동원주의적 정치행정체제를 구비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유발한 부산물이 부패라고 할 수 있다.¹¹⁾

셋째, 사회주의 국가의 부패는 직업적 관료의 역할과 기능보다는 오히려 당 관료와 군 관료가 권력우위를 차지하고 철저한 계층제적 지배와 명령이 복종관계가 우위를 차지하는 고전적 관료제의 역기능에서 파생된 결과의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부패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부산물이거나 정치 경제의 불균형적인 성장이나 발전과정에서 생긴 필요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부패시스템의 결함과 미비, 공직자들의 공직윤리관의 결함, 그리고 건전한 시민문화의 부족과 환경적 요인, 특히 구조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 등에서 나타난 결과적 산물이란 특징을 지적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8) 김영중, "부패문화의 개혁정책", 한국행정연구 2-1(1993), p. 26~46

9) Gibson Burrell and Gareth Morgan, *Sociological Paradigm and Organizational Analysis* (London : Heinemann, 1979)

Caiden Gerald : et.al "Administration Corruption" .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7). Vol. 37, 301~309

10) X이론은 인간을 악하고 게으르며 피동적이며 타율적 통제를 방아야 된다고 보는 인간 관으로서 Y이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Douglas, McGregor, *The Human Side of Enterprise* (New York : McGraw-Hill, 1960)

11) 박완신, 북한행정론(서울 : 회성출판사, 1988)

서성우, "북한의 인권실상", 북한. 통권 252호 50~57

IV. 남북한 부패의 모형비교 : 원인, 결과 및 주요 사례

1. 북한의 부패

북한의 부패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터 논의한다.

첫째, 부패는 북한의 정부관료제의 구조적 병폐에서 유발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제도적 취약에서 부패의 기회가 제공되고, 이것을 통제 할 만한 통제외지의 부족과 정치행정엘리트의 공직관의 부족, 그리고 사회문화 환경적인 부패도양과 유인의 변수가 핵심적인 부패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우는 1인 지배의 절대적 권위주의적 권력구조하에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화가 구조화 되어있는 정치행정체제이다.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사망하였으나 그의 신격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¹²⁾ 그리고 김 정일은 김일성의 유훈 통치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

“김일성은 백두산 정기를 타고나 천지조화를 다 안다. 축지법을 써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벽 마루를 부쳤다 떼었다 하면서 하룻밤에 수 천리를 왕래한다.”

“모래알로 성을 만들며, 술방울로 총탄을 만들고 가랑잎으로 대하를 건너간다. 김일성이 한번 노력하면 사나운 원수도 가을 풀같이 쓰러지며, 미소로 바라보면 마른나무에도 잎이 돋고 꽃이 핀다.”

“김일성이 1975년 5월 루마니아, 유고 등으로 여행 할 때, 그가 지날 때마다 사시사철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히말라야 산줄기와 알프스 영봉들도 머리를 숙이고, 지중해와 대서양도 숨을 죽여 겨울 같은 길을 열어 주었으며, 가시는 길을 따라 꽃물결이 일고 대륙을 뒤흔드는 환호성이 울렸다.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배우는 것은 세계인이 추세로서 수령을 모셨기에 20세기는 영광이 빛나고 있다.”¹³⁾

여기에서 김일성 신격화의 실증적 증거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는 동상의 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1년 현재 북한 전역에는 크고 작은 김일성의 동상과 흉상이 35,000여개가 있으며, 특히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신격화는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 권위주의 지배하에서 유발된 권력의 남용과 오용은 필연적으로 만연된 부패현상의 근원이다.¹⁴⁾

둘째, 북한의 부패는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의 부산물이며, 일반 국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 그리고 폐쇄사회(closed society)와 명령경제(command economy)에서 유발된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권위주의적 관료주의는 국가의 정치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차단되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권을 비합리적 방법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보되어 있다.

12) 자세한 것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도홍렬외공저, 김정일정권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13) 도홍렬, Ibid.

14) 김영중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관료제연구”, 북한연구(1991) 통권6호 : 7~23

특히 북한의 경제는 최근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식량사정은 심각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⁵⁾ 예를 들면 1990년에는 -3.7%, 1991년에는 -5.2%, 그리고 1992년에는 -7.6%이다. 1992년의 경우 경상 GNP로 남한과 비교할 때, 남한의 2945억 달러에 비교하면 14분의 1에 불과한 211억 달러이다. 더구나 북한 국가 예산의 약 30% GNP의 약 20~25%를 군사력 증강에 투자해 왔으므로 군비증강과 경제발전의 양대 목표의 동시추구에서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추계하여 1998년 7월에 발표한 1997년 북한의 경상GNP는 177억달러이며 1인당 GNP는 약 741달러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1997년 경상GNP는 4,374억달러이며, 1인당 GNP는 9,511달러이다. 이를 경제 규모면에서 평가해 볼 때 한국이 북한보다 24.7배 정도 크고,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경제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함으로써 경제규모가 80년대 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5~85년 기간 동안 북한의 연평균성장률이 4%대로, 1986~89년 기간에는 2%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온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경제침체에 북한경제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은 북한경제에 특히 원자재, 자본재, 식량 등의 조달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였다.

다음 <표 4-1>은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이다.

<표 4-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97)

구 분	단 위	북한 (A)	남한 (B)	B/A (배)
1. 인구	천 명	23,855	45,991	1.9
2. 명목 GNP	억달러	177	4,374	24.7
3. 1인당 GNP	달러	741	9,511	12.8
4. 경제성장률				
GDP	%	-6.8	5.5	-
GNP	%	-6.8	4.9	-
5. 대외경제				
무역총액	억달러	21.8	2,807.8	128.8
수 출	억달러	9.1	1,361.6	149.6
수 입	억달러	12.7	1,446.2	113.9
무역의존도	%	12.3	64.2	-
대비환율	원/달러	2.16	951.11	-
외 채	억달러	111.0	1,208.0	10.2
(외채/명목GNP)	%	67.3	27.6	-

※자료 : 한국은행, 「'97년 북한 GDP추정결과」, 1998. 7

〈표 4-2〉 북한의 GNP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성장률	5.4	3.8	2.7	-3.7	-4.3	-1.7	-4.6	-3.7	-6.8

※ 자료 : <http://www.unikorea.go.kr/kr/load/B22/B228.htm>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1991년부터 본격화된 것 같다. 1990년도에는 북한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공업 부문의 감소는 0.4%에 불과하고 건설부문은 5.9%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서 경제전반에 큰 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들어오면서 중공업 부문의 성장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전년대비 15.8%나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생산감소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2년에는 21.0%나 감소하였다. 중공업 부문의 부진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GNP 감소 폭도 1990년 -3.7%에 비해 1991년 -5.1%, 1992년 -7.7%로 이 두 년도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중공업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과 동시에 광업 및 건설업 분야의 커다란 침체가 경제후퇴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경제흐름을 살펴본다면 북한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1991년과 1992년을 전후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표 4-3〉 산업부문별 성장률 추이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5	1996	1997
농 립 어 업	-10.2	2.8	-2.7	-7.6	-10.5	1.0	-3.9
광 공 업	-2.9	-11.9	-15.0	-3.2	-2.3	-9.6	-15.6
제 조 업	-1.5	-13.4	-17.8	-1.9	-5.3	-8.9	-16.8
(경 공 업)	-6.2	-4.4	-7.3	5.0	-4.0	-7.1	-12.0
(중 공 업)	-0.4	-15.8	-21.0	-4.2	-5.9	-9.7	-18.7
건 설 업	5.9	-3.4	-2.1	-9.7	-3.2	-11.8	-9.9
서 비 스 업	0.3	2.5	0.8	1.2	1.5	0.8	1.1

※자료 : 한국은행, 「'97년 북한 GDP추정결과」, 각년호

요컨대 북한경제는 이미 오래전 부터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천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축소됨에 따라 결정적인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어간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북한식 자급자족경제는 엄밀히 말해서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었으며, 대외경제협력관계도 북한경제의 존속을 위해 이미 필요한 요소로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라는 외부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북한경제가 회생될 수 있음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폐쇄적 독재형 관료제는 비생산과 무능, 그리고 부패의 부산물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북한 탈북자 여만철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부패구조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며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실패와 관료제의 병폐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한다.¹⁷⁾

셋째, 가족중심적 족벌체제적 권력구조에서 파생된 비합리적 관료제도의 구조적 부산물이 부패를 배태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족벌관료구조는 필연적으로 권력쟁탈과 비합리적 연고주의, 파벌주의, 가족주의, 사인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 관료태도와 관련이 있다. 사실상 김일성은 1970년대 초부터 김정일에게 세습에 의한 권력승계를 시도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는 당 경공업위원장, 그 남편인 장성택은 당 청년사업부장, 김정일의 외5촌 동생인 강현주는 당 책임비서,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는 부주석, 4촌 동생인 김창주가 부주석, 김일성의 후서 김성애가 여맹위원장, 그 소생 김평일이라는 자는 핀란드대사였으며, 고종사촌 양현섭은 최고 인민회의 의장을 차지하는 등 엄청난 비율의 족벌관료체제의 인맥을 차지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족벌체제적 권력구조는 특수한 인간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게되어 실제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많다. 따라서 공직을 이용한 특수한 이익모형의 부패구조에 휩쓸리게 된다. 특히 김일성 사후 승계과정과 향후 국가정책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족벌간의 권력갈등의 가능성은 권력부패의 서식처로서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북한의 부패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란 정치적 상징(political symbol)에 의하여 절대적 지배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구조적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체사상이란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 이론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사람중심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은 “겉으로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내세우면서 김일성 중심의 지도노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사상적 무기”로 사용하고

16) 자세한 것은 다음의 참고인터넷을 활용할 것.

<http://www.unikorea.go.kr/kr/load/B22/B228.htm>

17) 귀순자 여만철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김일성별장은 약 8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별장을 365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경비하는 병력은 700-800명에 이른다. 이러한 병력은 김일성 주석이 일년에 한 번 잠깐 왔다 가는데 불과한 별장을 경비하는 병력으로서 이것은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이며 이것은 바로 권력의 신격화와 폐쇄적 관료주의에서 오는 부패라는 것이다.

18) 중앙일보 1947.7.31 중앙일보사 중국의 비밀 (월간중앙부록) 서울 : 중앙일보사 : 1993)

19) 도홍렬, *op.cit.*, pp. 315 ~ 323

있다.²⁰⁾ 특히 이러한 주체사상은 1992년에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만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요체인 것처럼 선전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적 주체사상은 바로 구조적·제도적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²¹⁾

1) 주체사상은 일반시민들이 정치적 참여과정은 봉쇄되고 극소수의 정치엘리트들의 권력유지용 정치적 상징이라는 점²²⁾

2) 주체사상은 인간을 획일화하거나 자율성을 배제하고 그리고 집단주의적 명령과 규범에 강제적으로 복종케 하는 독재통치 논리의 귀결이라는 점

3) 주체사상은 1인 독재의 명령과 행동의 사상이고 민주적, 폭력성을 내포한 적화통일의 논리라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부패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째, 북한의 부패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식 인권개념은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보장되며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 담보된다.”고 한다. 북한의 경우 인권은 북한사회주의체제에서만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나 귀순자 등의 증언에 의하면 허구이다. 즉 북한주민은 철저하게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그리고 소요계층으로 나누어 차별대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통제, 언론통제, 종교탄압, 거주이전의 억제, 취업의 강제 그리고 의식주 통제 등 철저하게 인권이 통제되어 있는 폐쇄사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유의 정도에 따른 인권보장은 13등급에 속하는 최하위의 국가이다. 특히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 소재 북한 벌목공의 실태에서나 15-20만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의 수용소에 실태는 바로 북한의 부패가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가를 말해 준다.

둘째, 북한의 부패는 소수 지배계층의 탐욕충족은 될지언정 절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정치 수용범들은 겨울에는 난방장치나 조명이 거의 없는 암흑같은 수용소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 하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간수들에게 구타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²³⁾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장기적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 북한체제의 몰락 위기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을 수 있다.

20) 강석승, 북한의 실상과 주변정세 (서울: 반도출판사, 1993)

21) 정치적 상징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Edelman, Murray J.,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pp. 1~221.

22) 북한의 인권보장정도는 세계 61개국 중 13등급으로서 앙고라, 캄보디아, 이라크, 소말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몽골, 그리고 불가리아 등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헌을 참조할 것. 김영중(1992) '북한의 복지행정정책' Vol.9 : 173

23) 북한수용소의 실태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문헌을 참고할 것. 월간조선 (1995.3) 서울: 조선일보사, 1995)

셋째, 내부적 부패의 외부적 승화를 의도적으로 시도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정치행정부패의 호도용으로 대외적인 테러나 폭력에 의한 평화 파괴적 행태로 표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 권력핵심부에서는 세계적화의 허황된 목표추구를 의해 시시때때로 야욕을 보여왔다. 예를 들면, 1968년의 1.21 청와대 습격사건, 1.23 미합푸에블로 공해상 납치 1969년의 미정찰기 EC-121기의 공해상 격추, 1970년의 무장계틸라 육상납파, 1974년 박대통령 영부인 저격, 1976년 미군에 대한 도끼 만행, 1983년 미안마 아웅산 폭탄 테러, 1987년 KAL858기 공중폭파, 민간인 탑승자 115명을 전원 살해한 사건, 그리고 1995년 10월에 충청도 지역에 무장 간첩납파 사건 등 수없이 많다. 최근 1987~1991년간에 걸쳐서 주요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 바로 부패의 망국병에 근원이 있다고 볼 때 북한의 심각한 정치행정부패의 결과는 체제의 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최근의 북한의 부패사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에 빠져 나온 것을 의미한다. “딸의 일 가족 등 17명을 탈출시킨 재미교포 최영도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딸에서 송금한 돈이 1/3만 전달되거나 심지어는 한푼도 전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간과정 어디에선가 증발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안전부원과 함께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김씨가 보낸 달러가 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 가운데는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순한 외환딜러 최세웅씨는 216만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치고 딸을 영국으로 보내올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돈이든 술이든 뇌물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성씨 (前북한 중앙방송 기자)에 의하면 안전원한테 잘못된 문제가 있어 한번 단속됐다고 해도 술 한두병만 찢러주지만 하면 무사히 풀려난다는 것이다” 24).

넷째, 북한의 만연된 부패실태는 사회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파생된 결과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사회의 부패실태는 다음과 같이 뇌물구조화하고 있다. 즉 뇌물 없이는 북한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사회에서는 전 부문에 걸쳐 조선노동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중앙당을 비롯하여 각급 당 위원회를 둘러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각급 노동당 간부들은 직장배치나 주택배정·입당 관련 외화·시계·옷감·식료품·담배·술등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특히 여성에게는 입당이나 좋은 직장 배치 등을 미끼로 정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무엇이든지 고여야 (바쳐야) 일이 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주요 뇌물수수 관행은 다음과 같다. 25)

24) 자세한 것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http://mbcweb.mbc.co.kr/desk/nkor/nk961206.htm>

25)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헌을 참조할 것:

http://www.koreascope.org/ktext/sub/2/1/nk4_4.htm

〈표 4-4〉 주요 뇌물과 수수액

구 분	뇌 물 수 수 액
매 관 매 직	정무원 국장은 미화 10만달러, 부부장(차관급)은 20만달러
평 양 이 주	미화 4천달러(지방주민의 평양이주 경우)
중 국 방 문	미화 2천달러(언제나 방문가능)
중 국 이 주	미화 5만달러(신분을 화교로 위장, 이주)
입 당	미화 2백달러(로동당 입당)
무 죄 처 리	절도범 복한화 700원, 살인범 일화 2만엔
신 분 증 대 여	미화 1백달러(1개월간 국가안전보위부원 신분증 대여)

※출처 : http://www.koreascope.org/ktex/sub/2/1/nk4_4.htm

2. 남한의 부패

남한의 경우 부패의 원인진단은 한 마디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적이다. 그 이유는 원래 부패현상의 속성상 복합적인 원인변수가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한국의 부패현상의 원인을 한국의 사례를 초점으로 살펴본다.²⁶⁾

첫째, 미분화된 권력문화(power-culture)의 역기능에서 파생된 부산물이 그 원인이다. 여기에서 미분화된 권력문화란 공사의 미구분, 권력의 남용 그리고 장기집권의 병폐 등이 주범이다. 권력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직자에게 맡겨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정치엘리트나 공직자는 마치 개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사유물인양 함부로 남용, 치부나 탐욕을 채우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자행하여 왔다. 예컨대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부패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부패는 체제와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리(mismanagement) 그리고 미비된 제도, 그리고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의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패를 유발시키기 적합한 소지(opportunity)와 상황, 그리고 제도 등이 바로 부패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오랜동안의 비합리적인 관행과, 풍토(ethos), 그리고 관료구조의 내적 부패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정치문화의 미성숙과 권위주의 정부의 정권창출과정과 집권기관중에 있었던 정경유착 등이 부패를 유발시킨 주요 요인으로 보게된다. 이 문제는 5공과 6공의 부패청산과정에서 나타난 실례에서 더 잘 알 수 있다.

26) 김영중, 부패학(4판)(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다섯째, 부패행위자 예컨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행정 엘리트 등의 열악한 공직관은 공직의 공공성(public interests)을 저버리고 개인의 탐욕을 추구하는 일탈행태(deviant behavior)로 전락하고 부패의 결과를 낳게 된다.

여섯째, 공직자들의 욕구 기대와 현실적인 처우의 관리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울러 직무의 불만족과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처우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보상관계를 포함하고 그 외 승진이나 교육, 후생 그리고 복지 등 공직자들의 장래성과 관계 있는 유형, 무형의 대우를 포함한다.

일곱째, 건전한 시민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한 부패환경과 부패의 토양이 그 부패가 자라기에 좋은 토양이 된다. 부패원인의 의사결정론(determinism)의 시각은 부패통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성하는 일반 시민들의 책임론이다. 한국의 경우 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시민이 건전한 시민문화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패현상의 공범으로 일조를 하는 부패문화(a culture of corruption)가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부패의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남한의 경우는 부패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만연된 부패 현상이 정치 사회적 불안과 불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주지하는 바와같이 역대대통령의(전.노 두 대통령) 천문학적인 불법적인 정치자금조성과 관련된 정치부패는 헌정사상 보기드문 두 대통령이 동시에 사법처리되고 이러한 엄청난 정치부패의 결과는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적인 실망과 불안, 그리고 가치체계의 혼란을 안겨주었다.

둘째, 부패현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기강의 해이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패는 국민의 계층간의 갈등결과를 초래하고 일반시민들의 정부불신과 불만을 집단 행태로 변화시키고 이러한 경로가 사회적 기강해이를 유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패현상은 정부의 정치행정의 생산비용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선의의 시민들에게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주는 역기능의 피해를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령 민원업무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해결하는 경우 그러한 업무의 비용은 점점 증가되고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더욱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²⁷⁾

넷째,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비정상적인 소득은 사치성 낭비 지향적, 그리고 물량주의적 분위기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7) 김영중, “개발도상국가의 관료부패모형연구”, 한국행정학보, (1985) 19~2:146 내외통신 (1994.4.30 : 1992.5.31)

※ 주요부패사례

1) 북한의 경우

북한의 경우 부패사례는 매우 포착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부패가 원래 빙산일각(iceberg model)의 속성도 있지만, 북한사회주의 국가의 비밀주의적 폐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의 사례의 출처도 귀순자나 국제적인 인권보호 기관 등을 통하여 그 자료가 수집되어 질 수 있다.

* 사례 1 (북한의 국경경비원과 통과료와 밀무역)²⁸⁾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경비하는 국경경비원들은 국경 밀무역업자와 결탁하여 이들로부터 뇌물로서 수 백원에서 수 천원의 통과료를 받아 치부하는 내용이다. 특히 흥미 있는 것은 과거에는 국경통과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약간의 술, 돈, 담배 등을 뇌물로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안전하게 국경통과를 약속한 대가로 수백, 수 천원의 통행료(뇌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는 밀무역업자들은 국영통과금으로 매번 1,000 원(북한화폐)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북한의 북경 북경경비원들에게 주어야 한다.

* 부패유형과 처리결과

이러한 사건은 분명히 군부패 사건이다. 왜냐하면 국경경비의 임무는 주변정세에 기민하고 근무경력이 오래된 하사관 즉 사관장, 상사, 중사, 그리고 하사 등이 주로 하며 고참 하전사(병사)등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군 자체의 형법이나 '뇌물 및 기타 직무태만처벌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²⁹⁾

* 분석과 시사점

국경경비원들의 국경 밀무역 투자는 국가보위부의 감시와 적발을 피해 은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뇌물수수행위로 말미암아 국경경비대원 중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 최고 10만원(북한화폐기준)정도의 목돈을 챙겨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1. 북한의 부패사례는 정치행정부패만이 아니라 군 부패에까지 확산되어 있다.
2. 뇌물의 정도는 다양하나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처벌과 적발이 엄격할 수록 비용은 상승한다.
3. 부패의 적발은 은밀하기 때문에 어렵고, 특히 빙산일각모형이 적용된다.
4. 정치행정의 부패와 연관되어 있으며 권위주의적 권력형 부패의 부산물은 하위체제까지 구조적 연결 고리로 이어져 있다.

28) 연합통신 (1994.5.7)

29) 북한은 1946년 12월 26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143호에 의하여 "뇌물 및 기타 직무태만 처벌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각 조의 부패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제7조에 의하면 공직자의 횡령의 경우는 정상인 중한 경우 사형이나 전부의 재산 몰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헌을 참고할 것. 김영종, 부패학(개정증보판)(서울: 송실대 출판부, 2001), p. 482.

*사례 2 (북한의 범죄)³⁰⁾

“북한은 ‘범죄없는 지상천국’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전지역에 걸쳐 절도·강도·강간·폭행·살인 등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평양 및 지방도시에는 폭력 조직이 번성하고 있다. 최근 가장 성행하는 범죄는 절도인데 주민들의 공장·기업소 물품절취, 군인들의 민가약탈, 학생들의 농작물 절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폭력조직들은 상호 공존을 위해 조직간에 서로 결탁하며 안전부·보위부·군부대와도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회안전부원(경찰)에게는 가전제품이나 백미 50~100kg 상당의 뇌물을 정기 상납하여 조직원이 체포될 경우 사후처리를 보장받으며, 군인들에게는 밀반출한 군수품이나 장물을 처리해주는 대신 특정인물 테러시 지원을 받는다.

이처럼 범죄 및 폭력조직이 크게 급증하자 ‘남성 5명중 1명은 교양소나 교화소(교도소) 생활경력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또한 여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 김일성 생일 80회(1992년)를 맞아 실시한 ‘대사면’시 함북 회령의 「88호 교화소」 출감자 100명중 여성이 1/3을 차지할 정도였다. 과거에는 부화사건(간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절도는 물론 살인등 강력 사건까지 속출하고 있다.”

*부패유형과 처리결과

북한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범죄는 넓은 의미의 부패의 유형에 속하며 특히 뇌물형부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각종의 부패와 범죄에 대하여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하여 왔다. 예컨대 오늘날 “부패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법인 “뇌물 및 기타 직무태만처벌에 관한 법령”이 1946년에 이미 제정 되었고 특히 동법 제7조에 의하면 공직자의 부패의 경우를 최고 사형과 전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³¹⁾

*분석과 시사점

북한의 부패의 사례 중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① 북한은 각종부패 특히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② 부패의 공생관계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 ③ 여성부패와 범죄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패의 속성상 이러한 것은 남한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30) 자세한 것은 아래문헌을 참조할 것
http://www.koreascope.org/ktext/sub/2/1/nk4__5.htm

31) 자세한 것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고할 것.
 김영중, op.cit. pp. 481~482.

*사 레 3 (국경을 열어주는 군대)³²⁾

“돈에 눈 멀어 국경을 열어주는 군대: 병사는 예로부터 나라의 방위에 치중하여 백성의 안정과 평화를 옹위하는 것이 본분이라 하였다. 허나 병사가 때식을 건너 살길이 없어 국경 경비진을 열어주니 과연 나라의 방위는 누가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전사는 한번 경비진을 열어주는 것이 5천원이라, 군관은 만원이라 하고 10년 군사 복무에 10만원 벌기 운동 하니 어찌 나라의 방위를 맡은 군대라 할까. 군관은 하루에 600g 주는 잡곡에 가정 부양은 주지 않으니 병사들에게 내려오는 식량과 피복을 팔아 사리사욕하니 병사는 어찌 살랴. 하여 저단백 에 걸려 허덕거리다 죽은 이 얼마나. 군대 내에서는 허약이라 한다. 민심이 소란해지자 ‘100호’ 라 자칭하여 속이니 이 어찌 될 말인가. 100호에 걸려 쓰러져 요양소에 가서 1개월 요양하여 감정 제대되어 죽은 자 얼마나. 나라의 방위를 맡은 군대가 허약에 걸리니 백성의 치지야 더 말해 무엇하리. 서로서로 경비진을 열어놓으니 나라의 수만금 문화재가 타국에 빠지고 공장의 설비를 훔쳐 치부하니 나라는 어찌 되랴.”

*부패유형과 처리결과

북한의 경우 국경지대에 있는 병사들이 뇌물을 받고 경비진을 열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사는 5천원, 군관은 만원이다. 경비진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국방의 문제가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군은 북한의 가장 강력한 안보집단이다. 그러나 군부패 유형은 어느 집단보다도 더 심각하게 부패가 구조화되고 있다.

*분석과 시사점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국경선을 넘는 것은 돈만 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현대전에 있어서 안보문제가 단순히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정치, 사회안보 등을 포괄하는 총력안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탄에 빠진 북한은 군사안보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군의 부패가 구조화된 현실적인 실태를 시사하는 사례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한의 경우

*사 레 1 (정치부패)

“노태우 전대통령은 6공화국 재임기간중 기업으로부터 3400~3500억원, 1987년 대통령 선거자금 중 남은 돈과 취임직전 받은 성금 1.100억원을 합쳐 모두 4,500~4,6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중 2,838억9,600만원의 뇌물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 검찰에 의하여 확인되어 1995. 12. 5 수사착수 47일만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에 의하

32)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헌을 참조할 것

한겨레신문사 1997년 6월 26일

http://www.hani.co.kr/~hankr21/K_976Q0163/976Q0163__O37.html

여 전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의 법적 청구를 한 정치부패사건이다.”³³⁾

*부패유형과 처리결과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부패사건의 규모나 액수 등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정치부패 사건이다. 이 부패사건은 대통령 개인만이 아니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의 부패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35개 이상의 재벌기업과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 전직 청와대 주요인사 등이 부패의 연결고리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외에 기소 처리된 것은 매우 미약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처리결과는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뇌물공여가 명백한 35개의 재벌 중 삼성, 대우, 동아그룹 총수 등 단지 7명만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그리고 노 전대통령의 핵심참모 중 이현우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경우만 구속기소, 나머지 10여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한 것이다.

*분석과 시사점

노 대통령의 정치부패 사건은 그 뇌물의 규모면이나 부패관련자의 기업체 혹은 관련 공직자의 수면에서 볼 때 전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1. 한국사회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구조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를 인지하게 되었다.
2. 대통령의 권력을 악용하여 부정축재를 하는 부패현상은 그 동안 제도적 통제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정치부패에 관한 근원적인 방지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이 필요 할 뿐아니라 통합된 부패방지법(integrated 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이 당위성, 그리고 독립된 부패방지 위원의 설치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최고 정치지도자와 권력엘리트들(power elites)의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공직봉사성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재교육·훈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케 하였다.
6. 건전한 기업문화의 육성을 위한 의식과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강구되어야 한다.
7.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요청되며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8.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의 근대화를 위한 전략이 요청된다.
9. 부패의 예방과 감시자로서의 국민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10. 부패 문화, 의식, 교육, 제도적 개혁의 통합된 반 부패전략이 시급하다.

*사 례 2 (경찰부패)

“저는 서울모 지구에서 팬시제품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업을 하고 있는데 99년 10월 13일 임대하여 사용해온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건물 2층에 있던 헬

스클럽 관원 등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건물비닐 천막밑에서 조그만 불꽃이 보이더니 점차 커져 이내 건물내로 번졌고, 공장 등 내부를 태운 후 출동한 소방차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 불이 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기계폭발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했다. 이후 화재사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여 온 서울 모 경찰서 J 경장이 수사에 간여 본인이 요청한 내용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얹고 목격자인 헬스클럽 관장을 불러 화재가 기계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증언하도록 회유하는 등 부당한 사건처리를 하였다. 그후 J 경장은 수사과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과정에서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본인에게는 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내부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후 본인은 대단히 큰 피해를 보게되었다. J 경장 후임으로 C경장이 후임으로 선임되어 다들 화재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사건처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C 경장은 다른 부서보다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하기도하여 어쩔 도리가 없어서 소방서와 목격자진술을 통해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임에도 경찰이 초기수사에서 불리하게 하였다. 우선 100만원을 마련하여 C경장에게 주었으나 기대외로 '원인불명에 의한 화재'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는 내용이다.³⁴⁾

• 부패의 유형과 처리결과

이 사건은 경찰관의 부패관여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사건에 대하여 J경장이나 C경장은 모두 경찰부패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경찰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을 취득하는 지위 남용형 경찰부패이다.

• 분석과 시사점

경찰의 부패원인을 행태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부패사건은 부패의 원인이 유인적인 원인으로 보다는 공직관의 결여와 권력남용에 의한 자발적인 부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하면 개인의 공직윤리의 결핍은 어떤 외부적인 유인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패의 원인 변수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 례 3 35) (조직적 경찰부패)

종암서 경관 50여명의 윤락업주로 부터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50여명이 윤락업주에게서 정기적으로 떡값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검사 李後甫)는 26일 미아리 윤락업주 南모(45)씨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종암서 소년계·방법지도계·형사계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50여명에게 떡값·휴가비 등의 명

34)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할 것
동아일보 / 2000/12/05 <http://ngo.donga.com>

35) 중앙일보, 2000.5.27일자

목으로 1인당 10만~50만원씩을 준 사실이 적힌 영업 수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南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종암서 형사제와 서울경찰청 등에 근무하면서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南씨로부터 모두 1천 7백만원을 받은 安모(42)경사도 구속했다. 검찰이 南씨 자택에서 압수한 영업수첩에는 떡값 상납 일자와 받은 사람·액수 등이 기록돼 있으며, 구청직원 한 명에게 1백만원을 준 내용도 적혀있다. 검찰은 南씨를 상대로 영업수첩의 상납내역을 조사해 떡값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찰관은 소속 경찰서에 비위 내역을 통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에는 구청 직원 극소수와 경찰관들의 명단이 적혀있었으며, 김강자(金康子)서장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에도 일부 경찰관들이 떡값을 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서장은 “부임 이후 지난 2월 전원 물갈이한 소년계·방법계 등 주요 단속부서 직원들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내가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고 주장했다. 김서장은 또 “부임 이후 집중적인 감찰단속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비위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패유형과 처리 결과

김강자 중앙경찰서 서장은 관할경찰서 경관이 윤락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옷을 벗겠다고 약속하였다. 경찰관과 윤락업체와의 공생관계는 조직적인 부패사건이다. 경찰은 민간인과의 컨넥션이 주종을 이루는 부패이고 처리는 경찰 감독자의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가 부패방지의 변수로 등장한다.

*분석과 시사점

경찰관 부패는 구조적으로 부패대상과 깊은 컨섹션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권력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관련 기관이 얼마나 부패를 상호 공생관계를 연결고리화 되어있는지를 시사한다. 경찰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특수한 프로그램 처우, 교육, 통제, 그리고 제도의 개선등이 복합적으로 요청된다.

*사 례 4³⁶⁾ (금융부패)

“2 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기관간 합병이나 감원 등 구조조정이 임박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가시지 않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터진 한빛은행의 5백80억원 부정대출사건에 이어 지난 2일에는 평화은행 차장이 42억원의 고객 돈을 횡령했고, 지난 9.1일에는 중앙종금 과장이 전산조작을 통해 고객돈 91억원을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사고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직원들의 개인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점장과 아크월드 관계자들이 수출신용장을 수백개로 조개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사실을 은폐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평화은행 관계자는 “각각 다른 고객 이름으로 대출받는 식으로 돈을 빼

돌렸다”며 “마음 먹고 사고를 치겠다면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부실 금융기관일수록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대형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중앙중금 관계자는 “전산망을 평소대로 체크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기강이 해이해지자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유형과 처리 결과

이사건은 전형적인 금융부패사건이다. 고객의 자금을 착복하는 것은 횡령이며 부패금융 부패이다. 이것을 단순히 금융사고라고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금융감독원 이성남 검사총괄실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겸업화함에 따라 소수 검사실 직원만으로 금융사고를 일일이 감시·감독할 수 없게 됐다’며 “금융사고를 막으려면 대출 업무를 정밀 체크하는 검사 시스템과 함께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업의 특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³⁷⁾

*분석과 시사점

부정대출과 횡령에 의한 금융부패의 원인을 분석하면 ① 내부 부패 통제시스템의 취약점 ② 외부의 정치권력과 관치금융의 영향 ③ 금융관계인들의 윤리의식의 결핍 ④ 사회적 기강의 해이와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등이다. 이러한 것은 개인과 제도, 그리고 환경의 통제 메카니즘(mechanism)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부패통제가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3) 북한과 남한의 부패모형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부패에 대하여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양국의 부패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반 부패 처방의 전략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논의한다. 남한과 북한의 부패현상에 대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현상의 원인이 양국 공히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에 의한 절대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에 근거한 권력형 부패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지배권력의 핵심은 공산당의 1당 독재와 그리고 소수 권력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 공산당 1당의 지배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형식적으로는 최고 정책 결정기관인 당중앙위원회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로 연결되는 1인 절대권력의 지배구조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부는 국가의 전당료나 정치행정관료들에게 에토스(ethos)를 배양하는 소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도 정치행정 권력의 오용이나 남용이 권력형 부패의 주요원인이다. 그 주체자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또는 장관 등 정치엘리트에 의한 부패현상은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에 사법 처리된 전, 노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패는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절대적 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부패 실상을 시사하고 있다.

37) 중앙일보, 200.9.4

둘째, 북한의 경우나 남한 공히 부패원인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이 정치행정관료의 부패문화형성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도 14세기 이래 도입된 유교문화의 영향을 권위주의 관료문화 형성과 권력의 남용에 의한 부패유발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³⁸⁾

셋째, 양국 공히 부패사건의 은폐와 비밀주의적 정치행정의 속성 때문에 강력한 보도의 통제에 있어왔다. 북한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일체 부패사건을 보도 관제하여 왔으며, 그 이유는 일반 시민의 불만이 상승되는 것을 막고 권위주의적 체제유지와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시위하려는 의도인 것처럼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3, 4, 5공화국까지는 부패사건의 연구보도가 금기(taboo)시 되거나 혹은 보도관제가 되어왔고, 6공화국 이후에는 상당히 완화되었고,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5, 6공화국의 부패청산의 역사적 과업이 시행되고 있다.

넷째, 양국 공히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과정상에 나타나는 필요악적 부산물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기능주의적(functionalist) 접근시각에 양국 공히 사회주의 체제의 취약점을 인정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와 경제특구의 설정, 그리고 제한적인 사유재산제의 방향으로의 전개과정에서 물질적 수요의 급속한 증대와 아울러 인간내면의 탐욕에 근거한 부패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북한의 경우 소위 '외화벌이'의 국가적 장려와 이를 둘러싼 부패가 귀순자들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도 1962년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특히 1970년대 초에는 개발도상국에 진입하면서 부패사태는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물량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청빈의 가치관을 압도하는 결과를 분석되고 있다.

다섯째, 양국 공히 어떠한 부패유형이 유행일까? 부패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양국 공히 생계형 부패가 일반적으로 유행이다. 즉, 일반 주민들이나 말단의 관리들은 부패자체가 그들 삶의 행태(modus operandi)로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실력 있는 중상 이상의 당 관료나 행정관료 등은 오히려 치부형부패가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여야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생계유지 보다는 축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부패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만연되어 있으며, 특히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엘리트는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가 그 동안 유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의 부패현상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자.

첫째, 북한의 경우는 정치(당), 행정, 군 관료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패현실을 풍자한 표현은 귀순자들이 관계 연구자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당 일꾼은 당당하게 인민의 등을 치며, 행정일꾼은 행세하면서 인민의 등

38) Gregory Henderson, *Korea : The Politics of Vortex*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을 치며, 군 간부는 군대군대에서 인민의 등을 친다.” 그리고 군의 부패에 대한 표현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무력부에서는 무조건 떼어먹고, 중대에서는 중간 중간 떼어먹고, 소대에서는 소리 없이 떼어먹고, 분대에서는 분별없이 떼어먹는다.” 한편 남한의 경우는 정치인, 관료, 군, 기업, 언론, 경찰 검찰이나 사법부, 그리고 금융계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연결고리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총체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부패는 1인 권력의 절대주의적 권력 구조적 카리스마 지배구조에서 근원한 권력남용형 부패와 그리고 국민의 생필품 부족현상에서 유발된 생계형 부패의 행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치엘리트들의 치부형 권력형 관계 부패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입당, 직장배치, 대학진학, 범죄단속, 식량과 생필품공급, 통행증 발급, 그리고 운전면허증 발급 등 어느 부문에서나 뇌물과 부패가 통한다. 뇌물거래의 형태는 고급관료에게는 외화(\$), 고급시계, TV, 냉장고, 카메라 등이 주로 사용되고 반면에 하위직의 관료들에게는 담배나 술 등의 소모성, 뇌물이 유행이다.³⁹⁾ 한편 남한의 경우는 5.6공까지 군사문화의 역기능, 정권의 비정통성,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그리고 관치금융, 관주도형 성장경제구조하에 있어서의 정경유착과 관경유착에 의한 정치 행정부패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경우는 족벌주의적 권력구조의 비합리적 정치행정체제와 구조에서 파생된 결과적 산물이 바로 부패의 원인이다. 족벌관료구조는 연고주의, 사인주의, 권위주의 관료행태로 연결되어 관료제도의 역기능을 배태시킨다. 특히 우리는 김일성의 족벌주의가 김정일로 하여금 그의 후계자로 삼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세습제 국가가 된 점과 그리고 그의 친인척 대부분이 정치행정의 주요 직위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⁴⁰⁾ 남한의 경우도 대통령의 친인척중심의 권력남용과 공사무분별의 탐욕형 부패구조가 특징인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5공화국의 경우 대통령 친인척 51명의 부패 연류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넷째, 반 부패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는 1946년 12월 26일에 제정한 뇌물 및 기타 직무태만 처벌에 관한 법령에서 각종의 공무원의 부패사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하여 제 7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 몰수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정상이 중한 자는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고, 전부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형법(1950년 채택) 제19장 178-193조에는 공무원으로 탐욕과 이기적 목적으로 직권이나 직무상 사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범죄와 부패사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제23장 265-301조에는 군인, 군무원으로 부패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여, 직권남용이나 월권행위의 경우 정상이 중한 경우는 사형까지 처벌하는 엄격한 규정을 볼 수 있다.

39) 내외통신 1992.5.31

40) 중앙일보, 1994.7.31

남한의 공무원 징계제도와 북한의 공직자의 처벌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남한의 경우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5> 남한의 공무원의 징계제도⁴¹⁾

구 분	내 용
징계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징계종류와 효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임용제한, 퇴직급여액 감액 지급 -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정직 :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감봉 : 감봉기간중 1/3 감액, 감봉기간 및 감봉처분종료후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함, 6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징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직 공무원 *단, 특수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없음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중앙 징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포함 7인으로 구성 -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차관) 포함 7인으로 구성 -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설치기관의 장의 치순위차) 포함 8인 이내로 구성
징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사유발생 → 징계의결요구(기관장)→징계위원회 의결 (관할징계위원회) →징계의결통부 →징계처분

북한의 경우⁴²⁾ 공직자에 대한 처벌로는 주의, 경고, 엄중경고, 강직, 철직, 혁명화, 출당, 사법처리(교화소) 등이 있으며, 가장 가벼운 처벌로는 경고가 있는데 이는 비교적 경미한 잘못에 대하여 경각심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경고보다 한단계 심한 처벌이 엄중 경고이며 이는 신분상의 변화는 없다. 그보다 한단계 높은 강직은 직위가 내려가는 것이고, 철직은 남한의 파면 혹은 해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책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혁명화 기간은 일정하지 않고, 본인의 혁명화 진척도에 따라 적게는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다양한다. 출당은 당원으로서 자격이 발탈되는 것으로 가장 무서운 처벌이다.

41) 이선우, 최진우 “남북한 행정체계 및 인사제도 비교연구”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회), p. 629.

42) Ibid. p. 629

남한의 경우 부패처리 기관은 매우 산발적이고 복잡하다. 예를 들면 관계법규만 하여도 10여개 이상이다. 즉 공무원법, 형법 중 공무원범죄부분, 공무원윤리법, 특정범죄 처벌 가중법, 정치자금법, 감원법, 부정방지 위원회 설치규정, 재산물수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다. 그리고 관계처리기관도 다양하다. 일반 공무원부패 수사기관으로 검사, 공무원의 직무와 회계감사 기관으로 감사원, 공무원의 재산관계 등록, 심사 등은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감사원 자문기관으로는 부정방지위원회, 각 부처의 감사실,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 행정기관에 이르는 감사실 등 다양하다. 이러한 것은 비 능률과 비 적실성을 노출 할 때가 많으므로 통합한 부패방지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그리고 독립되고 중립적인 부패조사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V.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부패현상을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부패는 본질적으로 정치행정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가치체계를 혼란시킨다. 특히 부패는 정부와 정치불신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최악의 경우 체제존립의 위기와 정권의 몰락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부패는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부패현상이 자본주의 국가의 전용물이란 주장은 1989~1991년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적인 몰락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부패의 파괴력은 사회주의 국가가 더욱 위력을 발휘한다고 지적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인 북한의 경우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물론 남한도 부패의 구조화, 대형화, 일반화, 그리고 확산화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있다. 남한의 경우는 자본주의 제도의 전반적인 우위성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부패의 파괴력이 상쇄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양국의 정치행정 엘리트들은 체제존립의 영속성을 원한다면 부패의 방지대책을 심각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행정부패의 결과로 인하여 파생한 인권의 보장과 아울러 인간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을 위한 획기적 개혁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반 부패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 부패정책수행 전담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부패현상은 심각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패의 역기능과 파괴력(destructive power)은 남한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다도 북한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 그 위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북한이 정권의 연장과 안정을 원한다면 부패추방의 획기적 개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남한 역시 정치·경제·사회적 총체적인 면에서 발견된 부패구조의 실체를 인지하고 종합적인 반 부패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특히 부패위기는 정권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결

과를 예상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예측에 대비한 정책대안은 남한과 북한 공히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보다도 반부패의 새로운 시스템의 장치가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이유는 부패의 파괴력과 폭발력이 경직되고 폐쇄된 사회일수록 더욱 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동현 (1990). “감사원 감사비리의 전말”, 「월간조선」 7월호(통권124). 188 ~ 203.
- 김번웅 외2인 공저(1991). 「현대한국행정론」 서울: 박영사
- 김영중 (1999). “효과적인 반부패정책”, 한국부패학회보, Vol. 4, 11-27.
- (2001). 부패학 서울: 송실대 출판부
- 김해동 (1983). “관료부패의 제조건”, 「행정논총」(서울대행정대학원). 21:1, 123 ~ 136.
- 내외통신 / 1992/05/31
- 도홍렬외 공저 (1993). 김정일 정권.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 동아일보 / 2000/12/05
- 박완신 (1998). 북한행정론, 서울: 회성출판사.
- 박홍식 (1990). “내부고발(whistle-blowing):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25(3). 769 ~ 782.
- 유종해 (1992). 「행정의 윤리」 서울: 박영사.
- 이선우, 최진우 “남북한 행정체계 및 인사제도 비교연구”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629.
- 중앙일보 / 1947/07/31
- 중앙일보 / 1994/07/31
- 중앙일보 / 1995/12/06
- 중앙일보 / 2000/09/04
- 하태권 (1993.2). “민원행정에서의 행정부패”, 「한국행정연구」 1 : 4, 108 ~ 127.
- 한겨레신문사 / 1997/06/26
- <http://www.hani.co.kr/hankr21/>
- <http://ngo.donga.com>
- <http://www.hani.co.kr/>
- <http://www.koreascope.org/>
- <http://www.unikorea.go.kr/>

외국문헌

- Beer, Michael (1980).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Santa Monica : Goodyear Co., Inc. 218 ~ 255.
- Brzezinski, Zbigniew (1990). *The Grand Failure*.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urrell, Gibson and Morgan, Gareth (1979). *Sociological Paradigm and Organizational Analysis : Elements of the Sociology of Corporate Life*. London : Heineman, 1979.
- Caiden, Gerald E. & Kim, Bun Woong (ed.)(1991). *A Dragon's Progress :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 West Hartford: Kumarian Press.
- Caiden, Gerald E. (1969). *Administration Reform*, Chicago:Aldine Publishing Co., p. 65.
- Carino. Ledivina V. (1986). *Bureaucratic Corruption in Asia-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s*. Quezon City : JMC Press, Inc., 114.
- Dye, Thomas.R. and Harman, Zeigler L.(1975), *The Irony of Democracy*, New York : Ducbury Press.
- Edelman, Murray,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 Frederickson, H. George (ed.)(1993),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 M.E. Sharpe, Inc.
- Gould, David J. (1983).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Illust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580) Washington:D.C.. The World Bank. 1-41.
-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Heidenheimer, Arnold J. (ed)(1978).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New Brunswick New Jersey:Holt. Rinehart and Winston, 546 ~ 548.
- Holmes, Leslie (1993),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ization crisi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Hoogvelt, Ankie M. M. (1976). *The Sociology of Developing Countries*, London : Mac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eaven:Yale University Press.
- Johnston, Michael (1982),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 Montere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Kim, Young Jong (1998).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Corruption Studies* (2nd Ed.) Seoul : The HakMun Publishing Inc.
- _____ (1997), *New Development Administration*, Seoul: Bobmun Sa.

- Klitgaard, Robert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2 ~ 63.
- Lewis, Carol W. (1991). *The Ethics Challenge in Public Service*. Washington D. C. : ASPA. 4 ~ 189.
- Montgomery, John D. (1967). *Sources of Administrative Reform: Problems of Power, Purpose and Politics*. CAG Occasional Papers Bloomington: CAG, p.1.
- Mosher, Frederick C. (1965). "Some notes on Reorganizations in Public Agencies," Roscoe C. Martin (ed.).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29.
- Nye, J. S. (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 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 : 2, 417-427.
- Werner, Simcha B. (1983), "New Direction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3 (No.2) 3